

과방위 국감 ‘욕설 문자’ 2차 충돌… 시작 40분만에 파행

국힘 박정훈 “전화 공개돼 사용 불가”…민주 김우영 “맞불 욕설 주장 허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여야의 이른바 문자 폭로 사태에 따른 충돌로 또 파행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과방위의 16일 국감은 문자 폭로 사태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우영·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간 공방으로 개시 41분 만에 중지됐다.

박 의원은 먼저 신상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김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그날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제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개털’ (민주당 강성 지지층) 등의 표적이 돼 전화를 쓰지 어려운 상황까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지난달 5일 김 의원이 과방위 회의에서 자신의 장인 사진을 공개하고 소회의실에서는 자신의 먹살을 잡고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의 문자에 욕설이 섞인 문자로 답했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김 의원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는데 위원장도 그런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셨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자 메시지 공개 과정에서 전화번호가 같이 노출된 것과 관련, “(문자 캡처본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번호가 비친 것”이라며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 공공연하게 명함을 파서 전화번호를 유권자들에게 알린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기간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제가 박 의원이 보낸 문자에 대해 똑같이 욕설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욕설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저한테 ‘이 찌질한 XX야’라고 문자가 왔다. 그래서 제가 ‘그 찌질’이라는 단어는 당신한테나 어울리는 단어야. 이 창의력 없는 인간야”라고 답신까지 보냈다. 근데 무슨 문자를 안 보냈다고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 실장을 공격했다고 한 달 전 일을 끄집어낸 것이다. 얼마나 파렴치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의사진행이 일방적이라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에는 고성도 오갔다.

국민의힘은 “중재하고 회의를 잘하자”는 거냐, 싸움을 붙이자는 거냐 (이상희 의원), “그판 식으로 할 거면 진행하지 마시라” (박충권 의원)고 언성을 높였다.

광주지검 부장검사, 눈물의 양심고백

문지석 검사, 쿠광 일용직 퇴직금 체불 ‘무혐의’ 뒤편 압력 폭로

현직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쿠광폴립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무혐의의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해당 부장검사는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반복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으며, 그 탓에 대검 감찰을 받고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석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우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쿠광의 취업 규칙 변경은 명백한 불법이며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문 검사는 국감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이라도 신속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 1월 쿠광 물류 자회사인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광 측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였던 문 검사는 취업규칙이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다. 문 검사는 특히 압수수색 결과 쿠광이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 ‘노동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말고, 이의제기는 개별 대응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정황이 확인된 것을 결정적인 불법 증거라고 봤다.

하지만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

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문 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으며,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도 사건 기록을 보지도 않은 채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문 검사는 설명했다. 압수수색 결과는 대검 보고서에서 아예 누락했다고 한다.

문 검사는 16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4월 28일 대검으로부터 내려온 ‘불기소 결정서’에 내가 서명할 때,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항의의 의미에서 같은날 불기소 결정서에 내 도장을 90도 꺾어서 찍었고, 검찰 내부망에도 이 결정이 큰 잘못이라는 근거를 모두 저장해뒀으며 반복적으로 상부에도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후 문 검사는 이를 뒤인 4월 30일 대검으로부터 감찰통보를 받았다. 압수수색영장을 전제로 처리하는 등 절차에 대해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였다. 이후 조직 내에서 “(문 검사는) 통제가 안된다”는 등 악소문이 돌았고, 지난 8월에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발령났다.

문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던 이들은 감찰을 받아야할뿐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안의 실체가 드러나 명예를 회복하고 관련자들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면, 기꺼이 사직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취재진 퇴장을 선언한 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회서 거짓말 안 통해” 대법원장 비판

“7만쪽 누가 언제 어떻게 봤는지 밝혀야…사법 독립, 책임 뒤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해남·완도·진도)의원이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피를 토하는 심경”이라는 박 의원은 이재명 사건의 전원합의회 회부 경위와 기록 열람·배당 과정 등을 캐묻고 질책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전원합의회 소부에 가서 저 혼자 눈물을 흘렸다”며 “3심제의 취지는 진실 발견인데, 공부 잘한 대법원장·대법관이 국회 앞에서 거짓말이 통할 거라 생각하느냐”고 다그쳤다.

그는 법원 관계자의 증인석 이동을 제지하며 “답변 후 밖에 나가 상의하거나 말을 맞추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접수·회부·검토 시점과 전원합의회 회부 결정 과정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부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 못 한다. 왜 소부 의견도 듣지 않고 전원합의부로 올렸느냐”며 “기록은 배당 전에도 임의로 본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7만쪽, 책 350권 분량의 기록을 누가 언제 어떻게 봤는지,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라는 메모는 누가 썼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장 국감인데 직무에 충실하게 답해야 함에도 일반론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일부 증인은 들락거리며 말을 맞추는 보고까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말하려면 그에 걸맞은 책임과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는 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시기 사법부와 정보기관의 문제를 거론하며 “국정원 개혁을 위해 싸웠다. 민주당이 막아냈다”고 소개했다. 또 “내란 사태가 성공했다면 모두가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며 최근 영장 판단과 사법부 대응을 겨냥해 “사사건건 영장이 기각되고, 왜곡된 신호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발언 말미에 박 의원은 “월요일 국감에서 7명의 의원이 한 질문과 오늘 거론된 내용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확히 답하지 않으면 종합감사에서 다시 물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사법부가 이러면 안 된다.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힘, 여야정·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 제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에는 정파가 따로 없다”며 전날 정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대출 규제 강화 등 ‘10·15 부동산 대책’을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진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으로 비판했

다.

이어 “반시장적 수요 억제는 집값도 못 잡고 서민·청년의 내 집 꿈만 깨는 다”며 “정책 중심은 실거주 1주택 실수요자”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 도심 종상향,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전세임·용적률 조정 등 실효성 있는 공급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외부 전문가로 ‘주거사다리 정상 특위(주사위)’를 꾸려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을 축으로 중앙당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서울시장위원장은 “전날 대책으로 피해가 커질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벌이지 말라”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 전역을 통째로 허가구역으로 묶은 일은 부동산 역사상 처음”이라며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규제로만 집값을 잡으겠다는 발상은 유행과 싸우는 것과 같다.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폭망 시리즈’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건강기능식품 1000ml x 3병(3,000ml)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